

與 패트 협상 '의원정수 확대' 쟁점 부상

원내지도부 이번주 본격화...평화·대안신당 지역구 축소 반대 여야 공조 재연 해법으로 거론...한국당 반대·비판 여론 부담

더불어민주당의 대야(對野)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 국면에서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이 한데 묶인 패스트트랙 '고차장정식'을 풀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론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27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원내지도부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공조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의 협상을 이번 주 본격화할 예정이다.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각 당을 개별 접촉하거나 다 함께 모이는 협상 테이블을 여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패키지 처리' 방안이 협상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에 사활을 걸고 있는 군소 야당들과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풀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현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하는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교육지책이다. 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친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지역구 축소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 정당의 기반인 호남의 지역구 축소 폭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서울 49→42석 ▲부산·울산·경남 40→35석 ▲대구

·경북 25→22석 ▲인천·경기 73→70석 ▲광주·전북·전남·제주 31→25석 ▲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 35→31석으로 지역구 의석이 각각 줄어든다. 민주당 역시 지역구 축소로 영향을 받는 당내 의원들의 '이탈 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원정수 확대를 통해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안

을 수정, 패스트트랙 법안 패키지 처리에 평화당과 대안신당의 협조를 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올해 초 '국회 예산 동결을 전제로 한 의원정수 330석 확대'를 제안한 바 있어 의원정수 확대가 패스트트랙 퍼즐을 풀 해법이라는 분석이 도출된다.

다만 민주당이 '의원정수 확대' 카드를 꺼낼지는 미지수다. 일단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반발이 명약관화해 보인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안으로 '비례대표 폐지 및 의원정수 270명 축소'를 제시한 상태다. 선거제

개혁 법안이 내년 총선에 적용될 수 있는 '게임의 룰'이라는 점에서 한국당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아가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의원정수 확대에 따른 여론의 '십자포화'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민주당은 일단 '의원정수 조정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의원정수 확대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등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조국 전 장관 이번주 소환될까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와의 연관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7일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입구. /연합뉴스

오늘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31일 본회의...5·18 진상규명 개정안 등 164건 표결

국회는 28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한 뒤, 오는 31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164건이 표결에 부쳐진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리에 군인 출신을 추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있다.

한편, 정쟁 법안으로 꼽히는 탄력근로제를 비롯해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

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탄력근로제를 포함해 비정규직 민생법안을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데 공감을 이뤘지만, 탄력근로제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는 녹록지 않은 상태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상임위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처리 시점도 미지수다. 최근 민주당 이원욱·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이를 포함한 법안 처리를 위해 협의를 시작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손학규 체제 '사면초가'

바른미래 당권파 문병호 탈당...당비대납 의혹까지 '시끌'

바른미래당 당권파로 분류되는 문병호 최고위원이 27일 탈당을 선언하면서 비당권파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는 손학규 대표 체제가 설상가상의 위기에 놓였다.

문 최고위원은 지난 5월 1일 손 대표가 직접 임명한 지명직 최고위원이다. 당시 4·3 보궐선거 참패 이후 바른정당계인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이 손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당무를 거부한 상황에서 '문병호 최고위원' 카드는 손 대표의 정면돌파 의지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날 문 최고위원이 탈당과 함께 손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며 등을 돌림으로써 비당권파로부터의 퇴진 요구와 당비대

납 의혹까지 받는 손 대표로서는 사면초가에 놓이게 됐다.

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손 대표가 당권에 집착하지 말고 제3지대 판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출발점은 안철수·손학규·유승민의 연대"라며 "그게 되면 원희룡 제주지사와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모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문 최고위원의 사퇴를 만류했는데 탈당까지 해서 너무 갑작스럽다"며 "다음주 주요 일과는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낙연 총리 오늘 '최장수 총리' 기록

2년4개월27일...총선 앞 당 복귀시점 '주목'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웠다. 이 총리는 28일 '재임 881일'(2년 4개월 27일)을 맞으며 직전 최장수 총리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재임 기록(2010년 10월 1일~2013년 2월 26일, 880일)을 뛰어넘었다.

언론인, 4선 국회의원, 전남지사 등을 거친 이 총리는 총리직을 역임하면서 정치적 중립감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기록하면서 이 총리의 정치 재개 시점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린다.

이 총리는 안정감 있는 국정운영과 함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의 이른바 '사이 다발언' 등으로 대중의 호평을 받으며

현재 여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당내 자기 세력이 적다는 점은 '정지인 이낙연'의 단점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세력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이 총리 주변에서 나온다.

현재로서는 이 총리의 거취 결정 데드라인은 내년 1~2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가 총선에 직접 출마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자 사퇴 시간(선거 90일 전)이 1월 중순이기 때문이다. 총선에 직접 출마하지 않더라도 선거에서 역할을 담당하려면 늦어도 2월 안에는 당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공수처법 내일 본회의 부의...오늘 여야 협상 '관심'

국회의장-교섭단체 대표 회동...합의 불발시 직권상정 가능성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놓고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의안 국회 본회의 상정의 바로 전 단계로, 부의안 통과되면 상정과 표결을 거칠 수 있다는 의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화상 국회의장은 원칙적으로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29일 본회의에 부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90일 논란을 두고 여당인 민주당 손을 들어주는

셈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이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의 처리 시점은 연말로 한정된다. 국회 관계자는 "문 의장이 29일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가능성이 크다"며 "여야의 합의가 우선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본회의 부의는 하되 실제 상정

시점은 특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 없이 공수처법 등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될 경우, 자유한국당은 물론 군소 야당들의 반발을 부르면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관건은 28일 예정된 국회의장-교섭단체 대표들의 정례회동이다. 이날 문 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은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도 여야 간 입장차를 줄이지 못할 경우, 문 의장은 29일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자동부의할 가능성이 높


다. 본회의 상정 시점은 문 의장이 선거제 개혁안과 내년도 예산안과 일괄처리 입장을 밝힌 12월 초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사법개혁안의 문 의장의 본회의 부의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의 자체가 시급하지 않다는 점에서 야권과의 협상 과정을 보면서 결정해도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당인 문 의장이 사법개혁 법안을 부의할 경우, 장외투쟁 등에서 나서면서 투쟁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정지 등 군소야당들도 선거법 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토지** ▶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 투자기치 좋음.
- 토지** ▶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정가능.
- 건물** ▶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 건물** ▶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우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병원** ▶ 광주 광산구 삼가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병원** ▶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병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근린시설** ▶ 전남 목포시 명륜동 토지 1131㎡(342.128평) 건물 : 7617.71㎡(2304.367평)
지하3층 지상8층 **감정가 : 54억6천5백만원 최저가 : (70%) 38억2천5백5십만원**
- 근린주택** ▶ 전남 장성군 진원면 산정리 토지 : 224㎡(67.8평) 건물 : 264.27㎡(79.9평)
지상2층 **감정가 : 4억6천2백만원 최저가 : (70%) 3억2천3백5십만원**
- 다가구(원룸형)** ▶ 전남 화순군 동면 백운리 토지 : 1582㎡(478.6평) 건물 : 298.92㎡(90.4평)
창고, 공장, 근린시설 적합 **감정가 : 3억6천1백만원 최저가 : (56%) 2억 2백2십만원**
- 다가구(원룸형)** ▶ 광주 북구 풍향동 767 토지 : 227㎡(68.7평) 건물 : 749.02㎡(226.6평)
지하1층지상3층 **감정가 : 6억7천7백만원 최저가 : (70%) 4억7천4백만원**
- 주택** ▶ 광주 남구 백운동 토지 : 225.5㎡(68.214평) 건물 : 243.77㎡(73.74평)
감정가 : 3억1백3십만원 최저가 : (70%) 2억1천9십만원
- 아파트** ▶ 광주 서구 금호동 쌍용에가 55평형 **감정가 : 8억3천5백만원 최저가 : (70%) 5억8천4백5십만원**
- 아파트** ▶ 광주 서구 풍암동 에스케이비 56평형 **감정가 : 8억2천만원 최저가 : (70%) 5억7천4백만원**
- 오피스텔** ▶ 광주 서구 치평동 로잔티움파크 78평형 **감정가 : 4억4천1백만원 최저가 : (70%) 3억 8백7십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